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전략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들어가는 말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 노동시장에는 근로자들의 병가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 이에 현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

1) 정책백서(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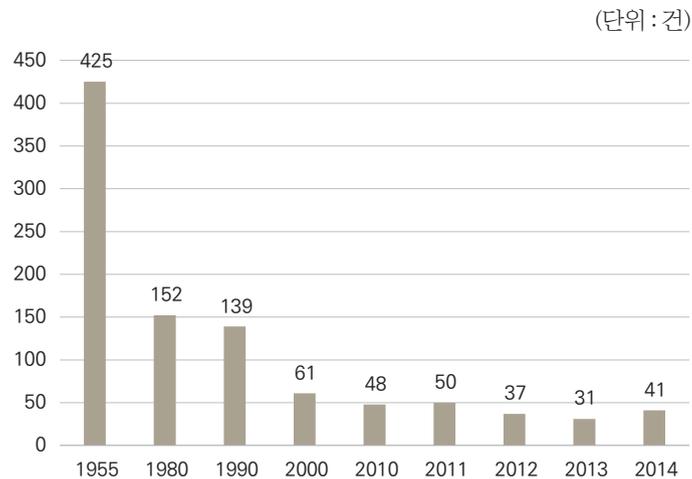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근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 직업병 등의 최근 통계를 제시하고 스웨덴 정부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하려 하는 정책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 스웨덴의 근로환경

사망재해

1950년대 이후로 스웨덴의 사망재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30년 동안 그 수가 절반 이상 줄었으며 2010년 이후로 사망재해의 수는 연 40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²⁾이지만 현 스웨덴 정부는

[그림 1] 사망재해 수(1955~2014년)



자료: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Sök arbetsskadestatistik

2)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ccidents at work statistic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사망재해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여 근무 중 발생하는 사망을 더 낮출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³⁾ 현 스웨덴의 사망재해는 주로 건설, 농업, 임업, 운수업과 같은 남성 중심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스웨덴의 최근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2009~2015년 동안 산업재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근로환경청은 2009년 이후의 산업재해 수 증가의 원인으로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 증가, 이민 근로자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심화 등 스웨덴 노동시장 내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특히 근로환경청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근로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현재 보고된 산업재해 건수 중 3분의 1이 열악한 사회심리적 근로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근로환경청의 근로생활에 대한 보고서⁵⁾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인 질병,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험청은 직장에서 얻은 근골격계 질환이 근로자의 잦은 병가와 조기퇴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⁶⁾ 따라서 현 스웨덴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수의 증가가 여성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병가의 증가(최근 5년간 70%가량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사회심리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3) 정책백서(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4)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2014-03.pdf>

5) Ibid.

6)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 보고서, “Sjukskrivningsdiagnoser i olika yrken - Startade sjukskrivningar(14 dagar) per diagnos bland anställda i olika yrken år 2009”, https://www.forsakringskassan.se/wps/wcm/connect/84cb4254-0889-4a51-9601-e4bc82931872/socialforsakringsrapport_2011_17.pdf?MOD=AJPERES

을 기울일 것이라 발표했다.⁷⁾

또한 최근 10년 동안 근로자들의 작업속도가 매년 약 5%포인트씩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시달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⁸⁾ 남성의 경우 작업장에 배치된 기계나 도구를 잘못 다루워 발생한 사고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넘어짐과 같은 부상 또는 환자, 고객, 학생 등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호소한 이들이 많았다.⁹⁾

스웨덴 내 직업병 역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근로환경청은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압박, 괴로움의 증가가 2009년 이후의 직업병 건수의 증가 원인이라 설명했다. 근로환경청의 2014년 직업병 보고서¹⁰⁾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을 호소한 근로자의 수가 40%가량 증가해 동일 기간 동안 직업병을 겪는 근로자 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2013년 근로환경 보고서¹¹⁾는 여성 근로자가 정신적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장에서 겪는 괴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비율이 2011년 21%에서 2013년 28%로 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7) 정책백서(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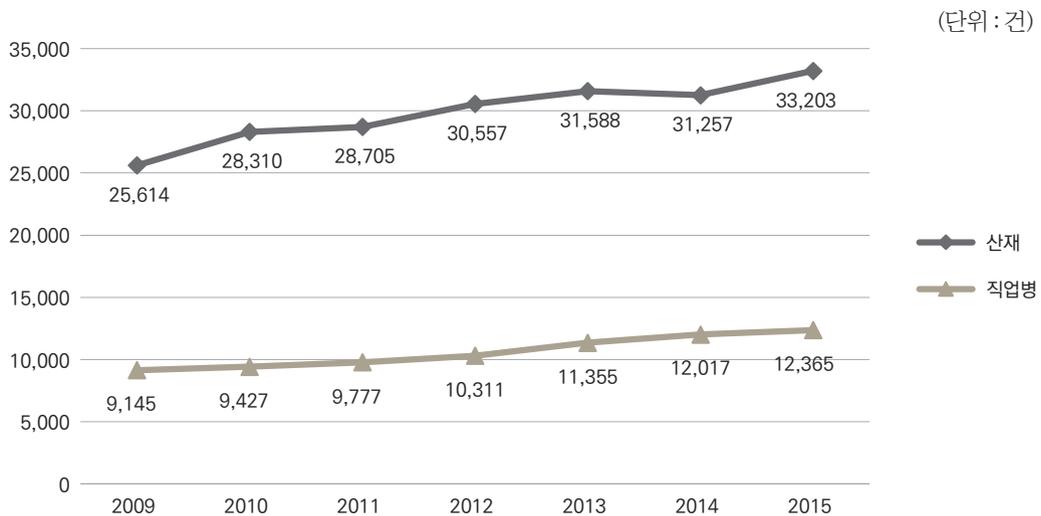
8)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2014-03.pdf>

9) 정책백서(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10)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Labour Inspectorate 2013 Sweden”,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om-oss/vart-uppdrag/annual-report-of-the-labour-inspectorate-2013-sweden.pdf>

11)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2014-03.pdf>

[그림 2] 보고된 산업재해 및 직업병 건수(2009~2015년)



자료: 근로환경청(Arbetstillsjoverket), Sök arbetsskadestatistik.

■ 근로환경 개선 전략(2016~2020)

현 스웨덴 정부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을 구상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1. 사망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산업재해 예방
2.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구축
3. 사회심리적으로 편안한 근로환경 제공

스웨덴 정부가 계획한 근로환경 전략은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힘을 쓸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²⁾ 이 전략을 통해 스웨

12) 정책백서(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덴 정부는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그들이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스웨덴 모델의 핵심인 노동우선주의(Arbetslinjen)¹³⁾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길 기대하고 있다.

사망재해 비율 감소 및 산업재해 예방 전략

스웨덴 근로환경청은 2007~2014년의 사망재해 통계를 통해 주로 건설업, 농업, 임업, 수산업, 운수업, 물류창고업 등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근로환경청은 2014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운수업과 물류창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중 도로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직종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이 밖에도 위험 산업군으로 꼽힌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는 지난 2007~2014년 동안 25명의 근로자들과 47명의 자영업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들은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중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역시 사망재해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 산업으로 꼽혔는데, 특히 건설업은 한 공간 내에 여러 하청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사망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¹⁵⁾

13) 노동우선주의는 1950년대 렌-마이드너 모델의 도입과 함께 사민당 정권이 수립한 노동시장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노동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한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사회권으로서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노동의무를 다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직업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가능한 한 많은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통합함으로써 최우선 정책목표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용중심적 정책을 펼친 것은 '복지의 첫걸음은 고용'이라고 할 만큼 고용이 소득안정, 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14)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sskador 2014",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sskador-2014-rapport-2015-01.pdf>

15) 스웨덴의 과건 및 하청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문제는 원청회사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산업별로 혹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한편 근로환경청이 스웨덴 내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¹⁶⁾에 따르면 이민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자주 사용하고, 반복되는 작업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민 근로자들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은 스웨덴어 구사 능력과 스웨덴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근로현장에서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와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그에 맞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청은 산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청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피해자의 신고와 등록을 돕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환경청은 산업재해와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2015~2018년에 걸쳐 스웨덴 기업들의 근로환경법(Arbetsmiljölagen)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사는 현재 근로환경청과 국세청, 경쟁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등 기타 협력기관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운수업이나 물류창고업과 같이 도로 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국과 협조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험 산업군에서 근무하는 이민 근로자들을 위해 환경보호청,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 함께 스웨덴의 근로환경과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를 책자와 웹사이트의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¹⁷⁾

16)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Migrantarbete inom den gröna näringen”,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publikationer/kunskapssammanstallningar/migrantarbete-inom-den-grona-naringen-kunskapssammanstallningar-rap-2012-14.pdf>

17) 정책백서(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구축

현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분석이다.¹⁸⁾ 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근로환경청의 보고서¹⁹⁾에 따르면 스웨덴 내 50~64세의 근로자들 중 14%가 근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어 현 직업을 은퇴연령까지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스웨덴 청년층의 산업재해 문제 역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약 4,000여 명의 청년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근로환경청의 보고서는 청년층 산업재해의 주 원인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 교육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은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18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⁰⁾ 스웨덴 청년층은 주로 도소매업, 요양기관, 건설, 중공업 등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18) Ibid.

19)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2014-03.pdf>

20)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 보고서, “Den goda arbetsmiljön och dess indikatorer”, <https://www.av.se/globalassets/filer/publikationer/kunskapssammanställningar/den-goda-arbetsmiljon-och-dess-indikatorer-kunskapssammanställningar-rap-2012-7.pdf>

산업은 고중량의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은퇴연령이 낮게 나타나는 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산업 내 어떤 근로환경이 그들의 이른 은퇴를 야기했는지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환경청과 사회보험청은 산업재해 피해자의 부상 회복과 재활을 위해 고용주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사회보험법(S2015/07796/SF)에 따라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심리적 근로환경 조성

최근 들어 스웨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와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다.²¹⁾ 특히 사회복지와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고 가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스웨덴의 돌봄서비스는 주로 공공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근로자들은 스웨덴 복지시스템 내의 일정 부분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근로자들의 잦은 병가는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 볼 수 있다.

스웨덴 정부와 근로환경청은 근무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근로환경청은 스웨덴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300여 명의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로환경청은 이 조사를 2016~2017년에 걸쳐 스웨덴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

21) Eurofound 홈페이지, “Sweden: EWCO comparative analytical report on Work-related Stress”, <http://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comparative-information/national-contributions/sweden/sweden-ewco-comparative-analytical-report-on-work-related-stress>

이다. 또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와 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인력 증가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러한 투자 방침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외에도 현재 해당 서비스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압박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있다.

스웨덴은 유연근로제를 잘 활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유연근로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스웨덴 내 몇몇 노조들은 유연근로제가 일-생활 간의 경계를 허물어 근로자를 무한 근로(Limitless working)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생활 균형이 무너진 무한 근로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경영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대 근로자들 역시 잦은 교대시간 변경과 야간근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와 근로환경청은 근무시간이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²²⁾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근로환경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동료들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환경청은 잠재적인 괴롭힘, 따돌림에 대해 미리 인지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5년 근로환경청이 발의한 법안(AFS 2015: 4)에는 임원과 관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2) 정책백서(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 맺음말

앞서 살펴보았듯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와 근로환경청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최근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andsorganisationen Sverige: LO)과 사무노동자연합(PTK), 스웨덴 경제인연합회(Svenskt Näringsliv)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75억 크로나를 공동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²³⁾ 이 계획은 3년 동안(2016~2018년) 진행되며 특히 근로환경에 대한 교육 제공이 주 목적이다. 이 교육에는 사회심리적 근로환경 및 화학물질이 가져다 주는 위험, 작업장에서의 건강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 내 관리자와 안전 담당자는 근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예방적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근로환경 개선 전략(2016~2020)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웨덴 정부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근로자들과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 가지 중점분야를 두고 관련한 정책 및 방안을 어떻게 도입, 활용할 것인지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²⁴⁾을 자랑하는 한국은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장기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한 근로환경 개선 전략의 사례는 배울 만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특히 스웨덴에서 사망재해의 수가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 수치를 점점 더 줄이려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KLI**

23) 스웨덴 경제인연합회(Svenskt Näringsliv) 홈페이지, “Klart med stöd för arbetsmiljöutbildning”, http://www.svensktnaringsliv.se/fragor/arbetsmiljo/klart-med-stod-for-arbetsmiljoutbildning_634989.html

24) 국제노동기구통계(ILOSTAT) 홈페이지, http://www.ilo.org/ilostat/faces/help_home/data_by_subject?_afLoop=118907682177564&_adf.ctrl-state=3g4gl53ze_238